

의안번호	제 29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3월 일 (제 307 회)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발 의 자	장선배 의원 외 6명
제안연월일	2012년 3월 5일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97
----------	-----

제안 연월일 : 2012. 03. 05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외 6명

## □ 주 문

- 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국비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가의 중요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하도록 촉구함

## □ 제안이유

- 정부는 작년 말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심의 시
  - 보육료 지원비 3,698억원 증액하고, 올 3월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 정책 시행
  - '13년부터는 0~2세의 양육수당 지원도 현재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
- 전액 국비사업인 5세아 누리과정과 달리 만 0~2세 무상보육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로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금번 무상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보육시설 및 인력확보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현재 충청도내 취원률이 80%정도이며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 간다고 가정하면, 수용능력과 보육교사 절대부족 사태가 예견되며, 특히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수요 증가는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본 무상보육 정책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5세아 누리과정 실시에 이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보육의 근본 취지와 육아의 현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을 촉구건의 하고자 함

#### □ 촉구건의안 이송처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 □ 첨부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작년 말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심의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비 1조 4,949억원을 1조 8,647억원으로 3,698억원을 증액하고, 3,279억원을 지방비 분담액으로 하여 올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부터는 0~2세의 양육수당 지원도 현재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본 무상보육 정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5세 누리과정 실시에 이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육의 근본 취지와 육아의 현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의 표본으로, 무상보육의 형식만 취한 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확보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북도내 취원률이 80%정도로 0~2세 영아가 모두 어린이집에 간다고 가정하면 어린이집의 수용능력과 보육교

사 절대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실정이며, 특히 보육교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수요 증가는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5세 누리과정과 달리,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우선당장 국비증가분 140억원에 따른 지방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향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508억원의 지방비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충청북도 뿐만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 합니다.

첫째, 0~2세 유아 보육료의 전면확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보육료 국비부담률을 현재 40~50%에서 전액 국비로 상향조정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